

# 패트 법안 모두 본회의로... 여야 대치 고조

# 여 '4+1' 공조 예산안 先처리 방침

선거제→검찰개혁→민생법 순차 상정...9일 유력

검찰개혁법안 부의  
언제든 본회의 상정 가능  
민주 "9일이 표결 마지노선"  
한국당 "필리버스터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3일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지렛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최를 제안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담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까지 민생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가 없으면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무엇보다 하명 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

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수처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론도 있으나 당 지도부가 강경론으로 대응하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상이 아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한 뒤 이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에 앞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한 잠정안이 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연동률도 10%포인트 축소할 안이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잠정안은 정의당 등 '4+1' 단위 다른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에서는 일부 비례대표 의석수 양보는 가능하지만, 연동률을 50%보다 낮추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반영한 합의안이 거의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들을 상정할 본회의 날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9일이 유력하다. '4+1'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 기간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최소화 방안을 고려한 날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현재 '이재명 당선무효' 위헌 여부 심리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백중덕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0월 3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현재의 이번 결정은 이 지사 측이 지난 달 초에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는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

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뒤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현재의 헌법소원 심리 개시와 상관없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현재에 제청을 하고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 한국당·바른미래 '3대 의혹' 국조요구서 제출

靑 하명 수사·유재수 감찰 무마·친문 인사 특혜 대출 연루 의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대상은 3가지 의혹으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했다는 '금융농단' 등이 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박상도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국조 요구서에 따르면 두 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완호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윤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반 별도대를 조직,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 뿐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 수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선 "여러 비위 의혹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권력을 남용해 직권면직 처리했다"는 입장이며, 우리들병원 건에 대해선 "우리들병원 이상호 대표

가 산업은행에서 2012년 1천400억원을 대출받고, 2017년 대선 직전 796억원을 추가 대출받은 과정에서 제기된 정권 실세들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실제 실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조사권이 발동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는데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때문이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서명했다. 그쳤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여당 압박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경찰 수사, 정치적 음모"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지난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청장 재직시) 금품이 오갔거나 특혜를 줬다는 것은 실체나 증거가 없고 정황도 맞지 않는다. 관련자조차 진술을 계속 바꾸는 등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최 전 청장은 "혜택을 준게 아니고 푸른 길과 교통난이 심한 백운광장 옆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에 교통로 추가 확보와 공원 조성을 요구한 것이다"며 "업체의 이윤이 줄어들면서 불만을 사 수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기간이나 관련자 신빙성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음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구스럽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윤영덕 전 靑 행정관, 총선 광주 동남갑 출마

윤영덕 전 청와대 행정관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광주 동남갑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혔다.

윤 전 행정관은 "중앙 정치의 혁신, 광주 정치의 세대교체, 광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촛불 정신을 잇고, 새로운 시대 정신과 세대를 잇고, 중앙 정치와 광주 경제를 이어가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또 "광주가 키우고 대통령이 검증한 준비된 지역 일꾼이다"며 "지난날의 광주, 오늘의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 제가 대한민국과 광주의 내일을 위한 가슴 뛰는 변화를 만들겠



다"고 강조했다. 윤 전 행정관은 참여자지 21 지방자치위원장, 광주 YMCA 이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운영위원 등 광주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경선과 본선 캠프에서 지역 공약 개발을 담당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5월 퇴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업무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하시고 요건 충족이 가능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는 해당 항목의 서류 첨부하여 우리 조합사업의 업무대행을 위해 정해진 기일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명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 ◆ 사업장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 3번지 일원
- ◆ 예상 건립 세대수 : 260세대
- ◆ 예상 대지 면적 : 17,225㎡

**【입찰 자격 요건】**

1. 주택법 제11조의 2항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자격요건 (해당서류 제출)
2. 자본금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적정수준 3억원이상 (해당서류 제출)
3. 최근 5년 이내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현장이 1개 이상인 업체 (실적 확인서 제출)
4. 제3항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정도가 주택사업계획 승인업무 이상 추진 경험
5. 제3항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정도가 준공 업무 추진 경험
6. 공고일 기준 국제 및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해당서류 제출)
7. 법인 3년간 재무제표 제출 및 2018년, 2019년(1기회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8. 당 조합 업무대행 참여조건 제안서 (인력구성, 업무범위, 용역금액 등 세부내용)

※ 입찰 마감일 : 2019년 12월 6일  
※ 입찰방법 : 해당 서류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 e-mail로 접수  
※ 접수 e-mail : hanlsoli79@naver.com  
※ 연락처 : 010-8481-2730

진월동지역주택조합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서구 마북동 도로점 378㎡ 장기투자용 좋은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무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원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9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2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2648㎡ 주택 전용 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군 영산면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9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2도로 4323㎡ 유통시설 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국공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원리 915㎡ 창고·다세대 등 4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신10000㎡ 사할·화기 화살·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건물

- 운양동 아파트상가(지하) 205㎡ 매입 2억 창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1억6천
- 충장로4가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월산동 외곽도로 농협 부근 6차선점 244㎡ 건물신축합 13억2천
- 산수동 구원아파트부근 도로점 305㎡ 건물 519㎡ 5천에 180 임대중 12억
- 농성동 상공회의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양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뮤니티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318㎡ 건평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 원룸 내대지 등 교환원, 매도는 5억-7억
- 구례군 구례읍 서서천변(경면리) 11050㎡ 대세대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은 6억4천
- 파산중인 주택 구매 계림동 소방도점 142㎡ 2층집 164㎡ 집 좋은 1억6천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다세대 적합 은행 6억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옆문앞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률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